후쿠시마 시찰단 "방류 핵심 설비 점검…분석 속도 낼 것"

유국희 시찰단 단장 브리핑
주요 설비 설계대로 설치 확인
핵종 4년 운전 설비 자료 확보
21명 시찰단원 명단도 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은 지난 31일 "이번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종합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 자료도 확보해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시찰단이 지난 21~26일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해 진행한 현장 점검 내용을 설명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시찰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일본은 방출 기간을 30년이라고 밝혔지만, 시찰단은 방류가 30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인 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등을 점검했다.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원자력규제위원회(NRA)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시찰 과정에서 도쿄전력에 오염수의 ALPS 입·출구 농도를 담은 로데이터(원자료)를 요구해 확보했다"며 "회사 자산, 영업기밀 관련 내용은 (가져오지 않고) 열람했다"고 밝혔다.

시찰단은 연 1회 농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64개 핵종에 대해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운전된 설비의 데이터를 받았고, 이 중에서도 검출 이력이 많은 핵종 10여종의 경우 주 1회 측정한 입출구 농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도쿄전력에 ALPS 설비의 흡착재 교체 시기를 질의한 결과 오염수 8000t 처리 후, 주 1회 농도 분석에서 정화 능력이 저하됐을 때 교체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핵종 제거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 희석·방출설비에 대해선 "해수 이송펌프가 희석 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중수소 농도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해양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1회, 해양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와 상류 수조 사이 배관에서 매일 1회 실시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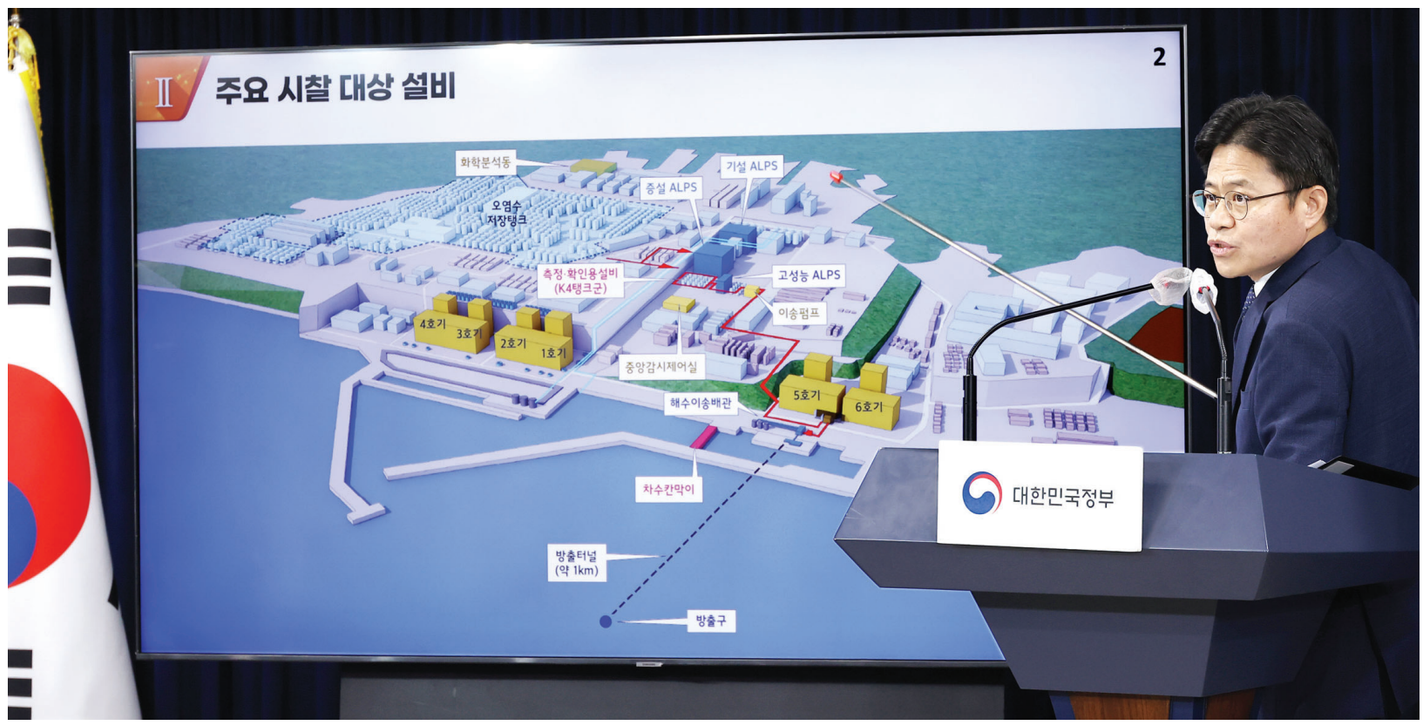
시찰단은 아직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오염수 이송·희석·방출 설비 현장도 확인했으며 앞으로 도쿄전력이 일본 NRA와 진행할 사용 전 검사와 유지관리 계획 등 자료를 확보해 종합적인 성능 판단을 할 것이라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어 오염수 처리, 이송, 희석, 방출 등 모든 단계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중앙감시제어실'은 전기가 끊기더라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무전전 전원설비'(UPS)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전에서 나오는 각종 시료를 채취해 측정·분석하는 시설인 '화학분석동'에서는 총 38대의 분석 장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료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절차 확인이 이뤄졌다고 유 위원장은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다만 "이번 시찰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이 설계도면대로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성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은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ALPS 정기 점검 항목, 유지 관리계획을 추가 확보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회견에서 화면을 이용해 현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최고위원 3파전…광주 출신 김가람 출마

다음달 9일 전국위 투표 선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인해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광주출신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김도읍 위원장)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 6명 가운데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김한구 현대자동차 사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정동희 작가는 명단에서 빠졌다. 배현진 선관위원은 브리핑에서 "김한구 후보는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다음 달 5일 토론을 거쳐 9일 전국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한때 지도부의 물밑 교통정리를 통한 '추대론'도 거론됐지만, 복수의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경선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지 않아 원외 인사들의 경쟁으로 치러진다.

당내에서는 호남 출신 청년 정치인인 김 청년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사실상 김 청년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청년 민심 얻기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 경쟁체제 도입해야"

복지사업 통폐합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 복지의 경우에도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

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처 간의 협업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겨냥,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실, 北발사체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응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는 북한의 발사 동향 보고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및 대응방안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29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자, 긴급 NSC 소집을 검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되, 논의 상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참석해 보고받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1차 평가가 공유되면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NSC를 소집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발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의 성격이 바뀐 데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발사체는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연합뉴스